



3월 8일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미화 노동자 공동 파업 승리 결의대회

공공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소속 고려대(와 고려대병원)·연세대·이화여대 미화 노동자들이 103주년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에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미화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의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다.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당하지 않으려고 쓴소리 한 번 못한 채 온갖 설움을 견뎌야 했다.

병원이든 공공시설의 건물이든 가장 어렵고 잘 안 보이는 곳이 미화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라 봐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그 공간은 낡고 비좁고 불편하기 일쑤다.

이를 개선하려고 미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단결된 힘으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투쟁들이 승리로 이어지다가 이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미화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과 공동 파업으로 전진했다.

미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박경석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두려운 시대에 미화 노동자들은 하루에 아홉 시간, 열 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조차 없이 유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합니다. 적어도 먹고살 만한 생활 임금, 즉 한 달에 1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미화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총액(76만 5천 원)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작업장이 전체의 80퍼센트를 웃

돈다는 통계도 있다.

이영숙 고려대 분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생활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 들은 미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4천3백20원) 이상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게 명백한 상황에서, 이것은 미화 노동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미화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대학 당국이 직접 노동자들과 협상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박경석 공공노조 서경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 당국은 뻔뻔하게도 진짜 사용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와 대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수시로 대학 당국과 연락하면서 조율합니다. 또, ‘원청인 대학 당국과 최저임금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에 세 대학 학생들의 지지가 매우 뜨겁다. 지지 서명에도 무려 학생 4만여 명이 동참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지하는 셈이다.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은 요지경

“오바마 대통령은 완전히 월스트리트의 금융 세력 편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배우 맷 데이먼의 속시원한 비판

“모든 독재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며, 유능한 독재자마저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미국 국제문제 평론가
로버트 캐플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 주신 리비아군 무아마르 알 카다피 지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리비아 진출
대기업들이 냈던 신문 광고

“카다피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흔들며 뭐라고 말을 막 하더라. … 내 말에 굉장히 감동받은 것 같은데 어느 대목에서 감동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카다피와 잘 통했던 이명박,
2009년 G8 회의에서

“이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서 정말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의 ‘무릎 기도’를 변호하는
한나라당 의원 강명순

“사고는 무슨 …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걸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 난 것 같이”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이런 자를 믿고 KTX를 타야 하나

“좌경 선동 방송사 사장이 한나라당과 정체성이 맞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뭔가?”

한나라당의 엄기영 영입에
열 받은 조갑제

“전혀 비린내가 없고 고소하다. 이렇게 향이 나지 않느냐”
한나라당 정운천, 구제역 침출수
퇴비를 옮겨주고 거의 먹을 기세

“벽에 붙은 MB 사진 떼는 게 장사에 도움 될 것”
집세도 못 내는 MB 대선광고
국밥 할머니에게 손님들의 충고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더 큰 비극이 예고되고 있다

3월 3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가 또 포탄 공격을 받았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오쉬노 부대가 미군이 맡아 온 파르완 주 차리카 지역의 경계를 맡은 뒤부터 공격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무인항공기 등을 배치해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파병 한국군이 있는 북부는 미군이 남부의 탈레반 소탕 작전을 벌인 뒤 더 위험한 지역이 됐다.

미군과 나토군의 탈레반 지역 소탕 작전은 항상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최근 남부지역 소탕에 따른 ‘풍선 효과’로 탈레반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났고 특히 북부지역으로 새로운 근거지를 확보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해 보도한 유엔 대외비 지도에도 잘 나와 있다. 지난해 3월과 10월의 안보 현황을 각각 표시한 이 지도를 보면,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동부 지역 열여섯 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는 한국 지배자들의 아류 제국주의적 열망이 숨겨져 있다.

미군이 올해 7월부터 철수를 시작하게 된다면 파병 한국군이 관찰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고 오쉬노 부대는 커다란 비극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은 아프가니

스탄 민중이 아니라 점령군대의 오쉬노(친구)로 각인돼 있다.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은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과 함께 PRT(지역재건팀) 참여국이 아니라 주도국”으로 ‘우뚝 섰다.’

미군을 등에 업고 집권한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조차도 점령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때문에 고조된 반정부·반점령 여론을 의식해 지금은 나토군과 지역재건팀(PRT)을 비판한다.

지금 워싱턴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미군과 나토군이 망신당하며 쫓겨나는 사태를 막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참전 정부들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캐나다 정부는 2011년까지 2천8백 명을 철군하겠다고 했지만 조기 철군 여론에 시달리고 있고, 미군 다음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에서는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한국 정부의 소식통조차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곳이다. 앞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주의 열강들뿐 아니라 아류 제국주의를 꿈꾸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무덤’이 될 공산이 적지 않다.

김어진 반전평화연대 공동간사

이명박 정부와 카다피의 유착 관계

한국은 카다피의 학살 만행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외교부가 지난주 유엔의 인도적 지원에 6억여 원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응의 전부다.

한국 기업들이 리비아가 경제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현재 리비아에서 떠난 공사 수수액은 40조 원이 넘는다.

2009년에 이명박은 G8 회의에서 만난 카다피가 “아프리카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 흡족해 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과도한 첩보 행위가 발각돼 국정원 요원들이 추방됐을 때, 이명박 정부는 ‘형님’ 이상득을 카다피에게 특사로 보냈다.

당시 이상득은 “용서해 달라”며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카다피를 달랬다.

김문성

폴라주 ④7

MB의 무릎 사용법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하나님을 위한 무릎기도



서민 등치는 니킥



임루전

연행된 짐바브웨 사회주의자 대부분이 석방되다

남은 구속자도 모두 석방하라

짐바브웨 법원은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 관한 영상을 집단적으로 봤다는 이유로 연행됐던 활동가들 45명 중 39명을 석방했다. 이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여섯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고 반란죄 — 최악의 경우 사형 — 로 기소됐다.

남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짐바브웨 반란죄 기소자 방어 캠페인’ 소집자인 레하드 데사이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활동가들이 조직한 정치적 압력 덕분에 짐바브웨 집권당[아프리카민족연맹-애국전선]은 피고 39명에 대해서는 반란죄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은 저명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처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란죄 기소를 취하하려면 캠페인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짐바브웨 무가베 정부가 [사회주의자 체포에 이어] 모든 야당 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여섯 명은 보석을 거부당했고 3월 21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판사는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고 말한다.

짐바브웨 국제사회주의조직(ISO)은 이집트와 튀니지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내려고 이번 모임을 열었다.

한 경찰 참자는 모임 참가자들이 북아프리카에 관해 토론했을 뿐 아니라 짐바브웨가 권위주의 정부의 장기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모임 참가자들은 짐바브웨에서 소수가 부를 즐기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배고픔, 빈곤과 실업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1백 명이 이 모임 장소에 들이닥쳤고 모든 참가자를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들이 심하게 구타당했고 심지어 몇 명은 고문을 당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법원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HIV 양성 판결을 받은 사람조차 며칠이 지나서야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

아직 수감 중인 사람들은 ISO 사무국장 문아라지 귀사이, 외채 반대 활동가 호프웰 겐보, 젠더 활동가 안도네이터 초토, 짐바브웨 전국학생연합 지도자 월컷 지무토와 에디슨 차쿠마, 노동 운동가 타텐다 롬베아라

라 등이 있다.

법원 심문 전날 한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문아와 다른 세 명은 독방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넣어 주러 갔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종일 재판받고도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감옥 당국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막았다.”

데사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캠페인은 연행된 사람들의 가족과 지지자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재판 비용도 필요하지만 연행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가 끼니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켄 올렌데 /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모금 계좌 :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1-04-089255
다함께는 이곳으로 모인 돈을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 인사들도 석방을 촉구하다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을 방어하는 서명 운동이 다함께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이 서명에 한국의 저명한 진보 인사 2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와 의원단 전원이 서명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도 서명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은 공동대표, 사회진보연대 박하순·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 생명평화교회 최현국 목사, 범국민교육연대 김태정 사무처장, 서울대 박배균 교수 등도 서명했다.

이 서명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대학 미화 노동자 투쟁

승리의 행진은 계속돼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김지운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은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는 적립금만 2천3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부자 대학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등록금을 2.9퍼센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월 1백만 원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미화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가 절대 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우리 부모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대학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에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당국에게 등록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인 대학 당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과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결합해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세 대학 미화 노동자들은 3월 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했는데도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 3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경석 공공노조 서경지부장은 이 투

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수많은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희망 투쟁”이라고 했다.

이 투쟁이 승리하면 곧 이어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고, 나아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물가인상 때문에 고통받으며 임금 인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즉 단호한 투쟁과 강력하고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더욱 확대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나가야 한다.

교직원들의 연대도 필요하다. 얼마 전 고려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학교 직원들을 [미화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세 대학의 교직원 노조는 대학 당국의 대체인력 참여 강요를 거부하고 미화 노동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미화 노동자 투쟁이 승리한다면, 향후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나 교수노조로 조직된 진보적 교수들도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박성환



노동자·학생들의 아름다운 연대 나흘간 세 대학에서 진행된 지지 서명에 무려 학생 4만여 명이 동참했다.

고려대 “학생 등록금은 내리고 노동자 임금은 올려라”

고려대 학생들은 미화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려고 ‘청소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고려대 학생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를 결성했다. 총학생회, 문과대학생회, 다함께 고려대모임, 고려대 학생행진, 생활도서관이 여기에 참가했다.

지대위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강 이후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모았다. 매일 학생과 조합원들이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홍보전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구호가 담긴 बै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서명도 받았다. 학생들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파업 하루 전

까지 무려 1만 7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려대 전체 학생 수는 2만여 명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알리는 현수막도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대량 제작해서 걸었다. 그동안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건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있었다. 이때도 자리가

모자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3월 5일에 열린 파업 출정식과 8일에 열린 파업 집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지금 학생들은 등록금 인화와 수업 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 투쟁을 준비하는 중이다. 학교 당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교육 투쟁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결합해 함께 맞서야 한다.

이원웅 고려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이렇게 생각한다

왜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이 중요한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앓는 채로 실질소득이 깎이는 상황에서 대학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서처럼 ‘임금 한두 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식으로 이것을 깎아내리고 다른 추상적 권리들을 앞세워서는 정말 곤란하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한 운동에서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금을 올려야 노동자들의 의식주가 개선될 수 있고 자신감과 존엄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은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더 큰 투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은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 즉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임금과 소득이 올라가면 반대로 자본가 계급의 이윤은 줄어들기 십상이다. 즉 임금 인상 투쟁은 자본가 계급 권력의 원천인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도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눌러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땀을 빼앗아 자본가들의 땀을 늘리겠다는 소리일 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고 떠들어대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3년 연속 삭감됐다. 지난해 쥐꼬리만큼 임금이 올랐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따라서 대학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미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말하듯이 정말이지 ‘등록금은 내리고 노동자 임금은 올려야’ 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임금이 오르면 학교 재정이 줄어들어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과 학생 등록금은 어느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관계가 아니다. 대학재단이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만 줄이면 얼마든지 등록금 인화와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예컨대 고려대 재단이 쌓아둔 적립금의 10분의 1만 양보해도 등록금 동결과 임금 인상이 모두 가능하고도 남는다. 결국 진정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대학재단의 이익과 노동자·학생 공동의 이익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학생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학 재단에 맞선 연대와 투쟁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등록금 투쟁과 임금 투쟁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동국대에서 미화 노동자 투쟁과 등록금 투쟁의 연결은 두 투쟁 모두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노동자·학생 활동가들은 이런 연대와 투쟁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이화여대 “뜨거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대책위원회’(이하 학대위)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9개 학생회·단체들이 모여 ‘이화인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월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월 2일부터 나흘간 강의실 연설, 정문 홍보전, 문자·트위터 홍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헌신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주

도적인 학생들의 수가 10명 남짓으로 부족했고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홍보와 개별 서명 조직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미화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여론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첫째 날에 1천3백 명이 서명에 참가해 목표 달성에 턱없이 못 미쳤지만, 둘째 날에는 4천5백 명, 셋째 날에는 8천3백 명을 순식간

에 달성했고, 마지막 넷째 날에는 오후 2시경에 이미 그 숫자가 1만 2백 명으로 뛰었다. 전체 재학생 1만 5천 명 중 3분의 2가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는 반응이 좋았고, 이 때문에 신입생들이 연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집회에서 발언도 하는 등 신선한 활력소가 됐다.

다함께 회원들은 3월 7일에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에 연대하자”는 기사가 실린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신문 13부가 판매되는 등 호응이 컸다.

이런 연대 속에서 미화노조 분회장님은 “우리에게 독을 약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뜨거운 연대의 경험을 쌓고 있다.

김승주 이화여대 10학번

연세대 “노동자·학생의 자신감이 타오르고 있다”

연세대에선 개강 이틀 만에 1만 2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미화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이것은 미화·경비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공대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세공대위는 2008년 학내에 미화·경비 노조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매년 선거로 새로 당선되는 학생회들도 대부분 참가해 왔다. 연세공대위는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올해 초 홍익대 투쟁 때도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다.

연세공대위는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맞춰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알리고, 간접고용의 부당성, 교섭 요구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발행하고 신입생들을 만나 간담회

를 진행했다.

파업 준비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강의실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획표를 꼼꼼이 조직했다. 노동자들이 아침 청소를 해야 했던 등교 시간에 정문 앞 연설을 했던 것도 바로 연세공대위 학생들이었다.

이런 노력과 홍익대 투쟁 승리소식이 결합돼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매우 높았다. 연설 경험이 전무한 노동자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투쟁 지지를 호소할 때마

다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학생들의 지지는 매우 컸는데, 파업 당일 미화 노동자 투쟁 지지를 호소한 <레프트21>이 2시간 동안 무려 66부나 판매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연세공대위를 비롯해 학생들의 응원 속에서 자신감을 불태우고 있고, 학생들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자극과 고무를 받고 있다. 이런 노동자·학생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김종환 연세대 대학원생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논쟁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을 방어하며

김인식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한다. 강령 개정의 핵심은 사회주의의 관련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자주파는 당의 강령적 목표를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민중 주체 민주주의”로 삭감하려 한다. 후퇴의 명분은 “당이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감안”(최규업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11년 전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당시와 비교해도 그 위기의 정도와 규모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 강령에서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후퇴다.

이번 강령 개정 논쟁은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내 세력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정파연합당”에서 사실상 “자주파들의 당”으로 바뀌었다.

자주파는 현 시기 남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변형 단계라고 본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일일 뿐이지 변혁 목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민주대연합 전략, 곧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 노동자 정당과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민주당)이 연합하는 전략이다.

이런 변혁론에 따라 자주파는 이미



2009년 영국 G20반대 집회에서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경제 위기로 반자본주의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사회주의적 대안 제시를 중단하려는 것은 “세계사적 흐름”과도 어긋난다.

2003년에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하려 했다. 1년 넘게 끈 논쟁 끝에 자주파의 기도는 패배했다. 2009년 정책당대회를 앞두고도 강령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로 끝났다.

그러므로 객관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는 실은 자주파의 낡은 강령과 전략을 당에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미 2009년 말부터 민주대연합 전략을 당의 핵심 노선으로 삼고 실행에 옮겨 왔다(이것이 이정희 대표가 강조하는 “유연한 진보”의 실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이뤄진 ‘범아권 연대’가 그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이 전략이 선거 영역

을 넘어 계급투쟁의 영역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불가피한 특정 사안을 두고 불가피하게 연대(전술적 제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시적으로 연대(전략적 연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정 기도는 이런 당의 실천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사후 조처인 것이다.

모두 함께 후퇴를 막아내자

현 민주노동당 강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힌다. 반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돼 있다(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형용모순이다.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이고 따라서 계급 지배 기구인 국가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는 나치즘의 정식 명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실로 옛 소련권 체제는 20년 전에 붕괴했고, 유럽 사회민주당들이 추구한 사회민주주의는 대중의 사회 변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사회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정책)로 질주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이런 경험에 근거해 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고 표방한 것이다.

물론, 그 사회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무엇보다 어떻게 그 사회에 이를 수 있는지(혁명이나 개혁이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원하는 사회주의가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약점이기도 했지만, 이런 모호함이 초기에 다양한 정파들을 민주노동당에 결집시킬 수 있었다.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자주파가 정작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아직 당 내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자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을 당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 자주파의 눈은 그래서 자신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세력만 바라보는 외눈박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함께는 자주파의 당 강령 삭감 시도에 맞서 현 강령을 방어할 것이다. 다른 당내 좌파와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함께하자.

후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당내 자주파는 다양한 논거를 들어 사회주의의 구절의 삭제를 강변한다.

먼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국가 탄압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탄압받는 단체와 개인 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진보적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일부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가 이적단체로 공격받지는 않았다. 사실, 민주노동당을 불법화시킬 정도의 상황이라면 반동적 침체기이거나 혁명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민주노동당 강령에 사회주의를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반동에 맞선 강력한 저항 운동을 건설하는 게 사활적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민주노동당원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연계가 탄압 구실이었다. 이때 민주노동당은, 북한 체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단체와 개인 들을 탄압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가 북한의 그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주파는 진보대통합을 위해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진보대통합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구절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사유가 전혀 아니었다. 북한 문제가 진정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강령을 후퇴시킬 핑계만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평등파가 “종북주의” 같은 모욕적이고 부정확한 용어로 민주노동당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탄압에 희생당한 당원들을 제명하려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일부 자주파 지도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북한의 자위권이라는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옹호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보대통합 논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그런데 자주파는 도리어 강령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분을 도려내려 한다.

셋째, 자주파는 당원들이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중 정당이니만큼 당원들의 강령 동의 수준이 불균등한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당 강령이 당원들(또는 노동계급)의 평균 의식을 반영할 수는 없다. 강령은 미래의 대안 사회 체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당원들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령적 목표와 당원(또는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강령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민주노동당 식 표현으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주의의 구절에 대한 이견 때문에 탈당하는 당원들은 매우 드물었다. 노조 지도자들이 투쟁을 배신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동조할 때, 일부 당 지도자들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할 때 적지 않은 노동자 당원들이 탈당하거나 당비 납부를 거부했다.

넷째,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대농)들 속에서도 당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들은 사회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주파가 의도하는 강령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선거 중심주의와 민주노동당을 노동계급 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바꾸기.

중소상공인이 개인으로서 노동자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이때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급을 배신하고 노동계급의 규율에 복무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노동자 운동과 그 정당의 건설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고무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의 강령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가망성이 거의 없지만, 노동계급을 당의 핵심 계급 기반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다.

자주파는 사회주의 강령이 투표에 언제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러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급투쟁 수준이다. 계급투쟁이 침체기라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이고, 반대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계급투쟁이 고양된다면 대중의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열 명을 탄생시킨 배경은 노무현 탄핵 반대 투쟁 물결이었다.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강동훈

물가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물가와 전셋값 인상으로 대중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조선일보]조차 “6백40여만 세입자 가구의 아우성은 거칠어질 것이다. ‘가진 자’를 향해 댈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노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대폭발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하고 걱정할 지경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 가까이
로 올라 노동자들의 부담은 폭증했다. 사
겹살이 ‘금겹살’로 불릴 만큼 올라 콩나
물, 두부 등으로 대신하면서 지출을 줄이
고 있는데도, 지난해 한 가정의 한 달 식
비가 6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식품값
부담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밀가루·설탕 가격도 대폭 올려야 한다
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전셋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해 집 없는 노동자들은 추가로 수천만 원씩 빚을 지거나, 수십만 원씩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서울의 2억 원 미만 전세 아파트는 16만여 가구 줄어들었지만, 2억~3억 원대 전세 아파트는 10만 가구 이상 늘었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수년간 임금이 동결돼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도 크게 늘었다.

전세 난민

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으로 신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자취방·하숙집의 전월세 폭등과 물가 인상이라는 고통이 추가됐다.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려고 옥탑이나 지하에 방을 구하거나 사람 하나 누으면 딱 차는 쪽방을 월세 30만~40만 원씩 내며 구해야 한다.

학교 주변 음식점과 대학 구내식당이 밥값을 올려 김밥 체인점이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대충 떼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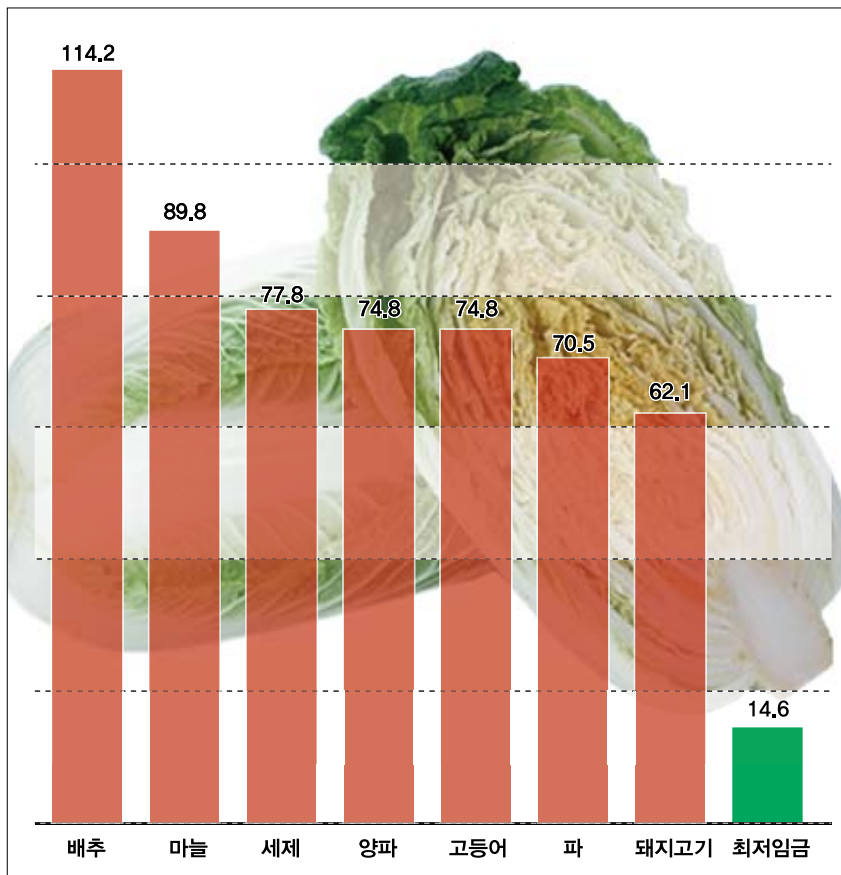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들먹이며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물가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 인상은 재벌·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이명박 정부 '노력'의 결과다.

전셋값 폭등은 집값 하락으로 투기꾼과 건설기업주들이 손해를 볼까 봐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2010년 4사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집값이 치솟던 2006년 4사분기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집 없는 노동자들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뛰는 전셋값을 감당하면서 가계대출은 대폭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트가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다.



최근 3년간 치솟은 생필품 가격과 짙은 최저임금(단위: %)

증가했다.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MB물가'가 지난 3년간 20퍼센트나 폭등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갑절로 오른 것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에게 물가 안정은 우선순위에 없다.

석유·밀·설탕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향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

이명박 정부는 기금값과 통신비를 낮춘다며 대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척했지만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유아무아됐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은 추진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유류세는 결코 낮추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하며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하반기에 전

기·가스·버스·지하철·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보수 언론들의 종편 진출을 위해 KBS 시청료 인상도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물가 인상에 맞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2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은 삶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
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승리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야만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려면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삶을 지키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민주노총의 임금 인상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가?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기업주들의 단체는 임금 인상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린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겨레》도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낀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는데도 최근에 물가가 폭등하는 것에서 보듯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업 매출에서 임금이 차지

하는 비율은 10퍼센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분 전체를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금 10퍼센트 인상은 물가 1퍼센트를 끌어올릴 뿐인 셈이다. 게다가 기업들 간의 경쟁은 가격 인상을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낚는다는 지배자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마트 물가'가 10퍼센트 정도 오를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임금을 올리는 게 필수적이다.

금리 인상을 요구해야 하나?

최근 물가가 폭등하자 〈경향신문〉, 〈한겨레〉 등과 진보진영의 일부도 그 대안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집값을 떠받치느라 추진한 저금리·고환율 정책이 물가·전세값 상승을 낳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곰리 인상은 부족한 생활비를
매우고 전세를 구하려고 늘어난 가계부
채의 이자 부담을 늘려 노동자·서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정부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으로 물
가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
를 깔고 있다.

실제로 <한겨레> 등은 물가 대책으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 언론들조차 물가 인상이 지나쳐 기업들의 이윤을 줄일까 봐 걱정하며 고금리·저환율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을 보더라도 고금리·저환율 정책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진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진보진영은 오히려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확실히 통제하라고 요구하고, 간접세 삭감과 부자 증세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공공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가격 : 16,000원

특집 지금의 이슈들

3대 세습 복합은 어디로?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_ 김하영

금융세계화론 비판 _ 강동훈

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_ 정진희

긴축의 정치학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니코스 폴란차스의 정치 이론 비판 _ 콜린 바커

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 한 가지 _ 정종남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 _ 장호중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예측 _ 철리 호어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시장을 떠나서 학교를 살리자! _ 김성보

《체 계바라, 혁명적 인간》
신화에서 걸어 나온 인간 계바라 _ 한수영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
프레임의 안과 밖을 모두 보는 법 _ 최윤진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전략과 전술의 기초 _ 최일봉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_ 김인식

새 상설연대체 - 한국진보연대의 재편再版이 될 것인가? _ 최영준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_ 한규한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_ 트로츠키

구독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사노련 유죄 판결

이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최미진·전지윤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였던 여덟 명이 모두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바로 검찰과 재판부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헌 정부를 붕괴하자는 주장을 펴고 정치신문, 잡지를 발행하며 적극적으로 선동”한 것을 문제 삼았고, 검찰도 “유인물을 뿌리는 등 선전·선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다.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자유나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 보장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다. 여기에는 당연히 헌정부나 체제에 반대할 자유가 포함된다. 그래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들이 별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조차 사노련의 주장은 대형 서점이나 대학 강의 교재 등에도 버젓이 실려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심각한 모순과 불평등, 부조리를 비판하며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진정한 폭력

재판부는 사노련의 “폭력 혁명” 주장을 맥락 없이 악의적으로 부각했지만, 진정한 폭력은 이 체제와 정부가 저질러 왔다. 독성 최루액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테이저건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하고, 지금도 복직 약속을 어기며 “연쇄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용산에서 보급 자리를 지키겠다는 철거민들을 죽인 게 누구인가.

사노련은 자본주의의 폭력에 맞선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고, 그조차 소수의 테러가 아니라 대중 행동을 뜻한 것이다.

결국 검찰과 재판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해고할 자유, 정부 비판을 틀어막을 자유,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억누를 자유를 뜻할 뿐이다.

이번 판결은 진보진영 일각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사문화’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종식’이니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1백30명으로 2008년, 2009년 입건자 수(각 40명,



3월 4일 열린 사노련 방어 집회. 사노련 재판은 국가보안법이 체제수호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70명)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했다는 이유로 한상렬 목사가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범민련, 실천연대 등도 계속 탄압받고 있다. 사노련 유죄 판결은 정부가 좌파를 마녀사냥해서 숙의양 삼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본질

그동안 공안당국은 북한 체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해 주로 북한과의 연계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남한의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통신’한 마당에 진보 인사들의 북한 교류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그런데 이번에 사노련은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단체인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은 소련과 동유럽 몰락 이후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국의 공산계열 동조”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변란 선전·선동” 문구를 첨가해 체제 비판 세력 탄압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체제를 남한과 다를 바 없는 착취·억압 체제로 보는 국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욱 의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노련 탄압에 반대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제사회주의자들(IS)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다(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다함께’ 최일봉 운영위원의 1992년 재판 당시 모두진술 참고).

‘민주 정부’ 또는 ‘참여 정부’를 자처한 자유주의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긴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 1년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4백13명)는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집권 초보다 더 많았다. 노무현 정부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마녀사냥을 지속했다. 자유주의 세력들도 자본주의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고, 그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민주주의 과제조차 자유주의자들은 해결할 수 없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과제들도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

탄압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국가보안법이 주되게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소수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마녀사냥해 진보운동 전체를 분열·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적 민주주의마저 제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맞선 공동투쟁기구인 국가보안법폐지연대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따라서 사회변혁가들은 폭넓은 반대 운동을 건설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사노련 방어 운동 건설 과정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탄압받는 동지들이 소속된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당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나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위주로만 방어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사노련이 처음 기소될 당시 꾸려진 사노련 방어 공동대책위는 구속영장 기간 후에는 소집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소속 개혁주의 단체들을 사노련 방어 운동에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유죄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3월 4일 항의 집회에서도 이 점이 드러났다. 이 집회에는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등에서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노위와 노건투 소속인 재판 계류자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집회 조직 과정에서 초기에 집회 제목을 “사회주의자 결의대회”로 홍보해 마치 사회주의자들만의 집회인 양 보이게 하는 일이 있었다. 집회에서 발표할 결의문을 공동주최 단체들이 미리 검토하게 하지 않은 것도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려는 자세는 아니었다.

사노위 활동가가 집회에서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만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구호를 모두 외치도록 한 것도 부적절했다. 사회주의자들만의 집회라는 식의 비개방적 태도였다.

이런 태도는 마치 자주파 단체들이 6·15선언 이행과 민족 자주 등 자신들의 고유한 강령을 지지해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이래서는 개방적으로 폭넓은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효과적 전술을 통해 대중들 속에서 활동하며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회변혁가의 자세일 것이다.

미국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준 위스콘신 투쟁

미국 노동자 수십만 명은 위스콘신 전투 덕분에 자기 힘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 위스콘신 전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투쟁들 중 가장 인상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학생, 고참 반전 활동가, 연금 생활자, 지역 활동가, 심지어 일부 경찰의 지지를 받아 매디슨 시를 마비시켰다.

그들은 만약 우익이 공격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도 반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익에게 전달했다.

2월 15일 미국 동북부에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없애고 노동자들의 단체협약권을 무력화하려는 공화당 주지사 스콧 위커의 계획에 반발하는 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위커는 상황을 오판했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노동자 운동은 조용했지만, 경제 위기가 가난한 미국인의 삶을 망치고 공화당이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것을 보자 위스콘신 주 노동자들은 행동에 나섰다.

많은 노조는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번 공격도 온갖 문제를 오바마의 책임으로



위스콘신 투쟁에 참가한 우체국 노동자들

떠넘기려는 공화당의 시도라고 믿는다.

이번 투쟁은 교육보조인협회(TAA) 노조가 2월 15일 열리는 주의회 합동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할 사람 수 천 명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절차상 발언자 1인당 발언시간은 2분이다. 애초에 재정위원회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자정이 넘어 청문회를 휴회할 때까지 계속 발언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위원회가 휴회를 선언한 뒤에도 노동자와 활동가 들은 청문회를 계속했고, 수백 명이 공공서비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회 건물 점거를 시작했다.

한쪽에서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 사람들은 음식과 침낭을 준비하고, 언론에 연락하고, 점거에 함께하자고 다른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실제로, 수천 명이 점거를 도우려

고 몰려왔다.

밀워키에 사는 24살의 사회복지사인 폴 굴루어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스콧 위커는 우리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쏠리고 있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점거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이가 위스콘신 투쟁에서 자신감을 얻어 시위에 참가했다. 50개 주에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위스콘신 주정부가 악법 통가를 강행할 경우 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노동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 주면서 위커의 법안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노동자 봉급에서 자동으로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가 중단될 것이다.

또, 노동자들은 의료보험과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며, 메디케이드[65세 이하 저소득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민의료보조 제도]와 저소득 가

정의 아동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베저케어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미국 노조 활동가들은 투쟁하는 위스콘신 노동자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많은 이가 공격의 규모에 놀라 이번 투쟁에 참가했다.

은퇴한 주 공무원인 도나 도일은 이렇게 말했다. “일단 누군가 다른 이의 권리를 앗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는 모든 이의 권리를 앗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위스콘신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저항하고, 반대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은퇴 교사인 잭 다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봉급을 최대한 줄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일부이며 죽으나 사나 함께할 것입니다.”

선 러덕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혁명을 전진시키는 이집트 노동자 투쟁

2월 25일 이집트군 소속 특공대가 테이저건,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은 다시 한번 전장이 됐다.

시위대는 호스니 무바라크 축출 후 군 최고평의회가 변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공격이 있은 후, 한 육군 장성이 군의 행동을 사과했고, TV와 페이스북으로 방송됐다.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이날 공격은 이집트군이 통제를 회복하려 하지만 아직 그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육군 장성들은 모든 파업과 시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하곤 한다. 그러나 파업 물결은 이집트 전역으로 번지면서 더 깊어지고 있다.

이집트군이 수에즈의 파업 항만 노동자들을 체포했을 때 노동자들의 친척들이 시위를 벌이며 노동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육군 장갑차가 시위대를 덮치면서 여성 한 명이 죽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사병들에게 시위대를 공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잊지 맙시다. 장군들은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서 군의 ‘중립성’을 가장하며 2월 2일 쟁패와 경찰들이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건은 군최고평의회가 결국 무바라크 장군들의 평의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보여 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경제의 3분의 1 — 군은 농업에서 주유소, 도로 서비스를 거쳐 안경과 전자 장비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다 — 을 통제하면서 이집트 민중의 돈을 강탈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집트 혁명의 구호는 ‘민중과 사병이 하나가 돼 무바라크와 그의 장군들에 맞서자!’가 돼야 합니다.”

파업과 점거

정치인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방문해 민주화 투쟁에 참가했다는 명예를 얻으려 한다. 지난주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과 조지프 리버만이 타흐리르를 방문했다.

그러나 혁명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파업과 작업장 점거가 발생한다. 노동자 투쟁은 매우 작은 작업장과 마을에서도 벌어진다.

암리아의 나드하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는 탄소 배출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면서 혁명 때

문에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들은 감옥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권리를 요구하며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어떤 이는 [경영자] 임금 상한제와 부패한 사장들의 축출을 요구했다. 많은 파업이 승리를 거뒀다.

이집트 최대 방직 공장인 가젤 엘마할라의 노동자들은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여 모든 요구 사항을 따냈다.

과거 무바라크 정부에 종속됐던 이집트노조연합(ETUF)은 이런 파업들을 비난했고 시위를 중단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ETUF 위원장 이브라힘 엘아자리는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시위는 임금 인상이나 최고경영자 해임 등을 요구한다. 이들은 일종의 극단주의다.”

이런 망언은 우체국 노동자, 공공교통 노동자와 간호사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독립 노조를 결성하도록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주디스 오어



사진 제공 Hossam el-Hamawy

2월 27일 노동조건 개선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은행 노동자들

이집트 민중이 국가안보국을 공격하다

지난주 이집트 민중은 국가 기구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취했다.

3월 4일과 5일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와 기타 도시들에서 시위대 수천 명은 경멸의 대상인 국가안보국 건물을 습격했다.

그러나 카이로 라즈글리 광장에 위치한 이 고문 기구를 지키던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쏘고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다.

이 운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다. 좌파 조직인 민주민중운동의 하산 무스타파는 <알바틸>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국가안보국 직원들이 많은 양의 파쇄한 서류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무스타파와 다른 활동가들은 이 문제로 시위를 벌이려고 사람들을 조직했다. 국가안보국 손에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이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점차 커졌고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건물을 둘러쌌다.

고문과 탄압에서 국가안보국이 저지른 죄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람들은 안보국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산 무스타파를 포함해 네 명이 군인들의 사격을 받고 다쳤다.

다음 날, 비슷한 시위가 이집트 곳곳에서 벌어졌다.

카이로 외곽의 나스라 시에 위치한 국



사진 제공 Hossam el-Hamawy

‘구체제의 상징’인 국가안보국을 점령한 시위대

가안보국 기지 밖에서 군 정보국 장교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군중을 달래려고 애썼다.

한 장교가 “안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건물로 밀고 들어갔다.

작은 무바라크들

사람들은 안에서 폐기 문서로 가득한 쓰레기 봉투와 먹다만 음식들을 발견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과 정치 활동가들을 감시한 자료가 초대형 문서고에 보관돼 있었다. 이 문서들 안에는 정보 제

공자들이 몰여 온 소문과 고문으로 받은 자백들이 기록돼 있었다.

국가안보국에 대한 공격은 더 큰 투쟁의 일부다.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고 파업을 벌이고 ‘구체제의 상징들’ — 공장, 사무실과 대학의 ‘작은 무바라크들’ — 을 직접 몰아내려 하고 있다.

관영 신문사 언론인들은 편집인들을 내쫓았다. 대학생 수천 명은 학장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기층 활동 — 거리 시위와 혁명가들의 발의 등 — 이 국가 기구를 정화하는 움

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군최고평의회는 자에게 유리하게 이런 움직임에 이용하려 한다.

3월 3일 아흐메드 샤피크가 총리직을 사임하자 국가안보국 직원들은 정신없이 문서들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후임 총리인 에삼 샤라프가 무바라크 정권과 밀착된 인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흐람〉은 고위 장교 출신인 사프트 엘자야트를 인용해 샤피크가 비밀 조직인 “반혁명부 장관”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군이 혁명을 보호한다는 지휘관들의 주장과 달리, 많은 활동가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파업을 벌이는 알파이음의 우체국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라즈글리의 시위대를 공격하고, 군사법정에서 젊은 시위 참가자인 암르 엘베헤이리에게 5년형을 선고하는 등, 군 지도자들은 곳곳에서 혁명가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이브라힘 알사하리는 사회주의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최고평의회는 반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여전히 기존 정부를 제거하려 한다. 모든 기존 정부 기구들을 말이다. 따라서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앤 알렉산더

리비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다

리비아 제2의 도시이자 리비아 혁명의 탄생지인 벤가지에서는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혁명위원회가 공식 기구로 탈바꿈했다.

이 위원회는 항쟁 지도부, 존경받는 지역 인사들과 반란을 일으킨 군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의 모든 기능 — 감옥, 군대, 경찰, 재판소 등 — 을 대중 통제

아래 두었다.

위원회는 필요를 기준으로 식량을 분배하고 기업들이 방기한 이주노동자 수천 명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첫 혁명 신문을 발행했다.

노동자 위원회는 전력발전소, 항구, 공항 같은 중요한 공공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벤가지 혁명위원회는 전국적 혁명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결성해 리비아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민중 위원회들을 서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옛 정권에서 이탈한 자들이 이런 위원회들의 정당성에 도전하고 있다.

옛 법무부 장관인 무스타파 모하메드

압릴 잘릴은 벤가지에 나타난 자신의 통제를 받는 ‘과도 정부’의 결성을 선언했다.

그는 카다피 정부 아래 체결된 석유 개발 계약과 기타 권리들을 가지고 미국, 유럽, 국제 기업들과 거래하려는 리비아 외교관과 기타 인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혁명위원회들은 잘릴의 선언에 크게

분개했고 그의 ‘과도 정부’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위원회들은 리비아 전체를 민중 통제 아래 둬으로써 혁명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먼 아사프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중동 혁명의 성격과 방향 논쟁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서방의 개입이 필요하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리비아에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다피의 학살을 막고 리비아 민중을 구하려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장 부위원장이자 북지국가소사이터터 정책위원장인 최병천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인권과 반제국주의(및 국민주권) 가치 중에서 전자가 ‘상위 가치’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없는 ‘반제권’은 실패했음이 복한. 리비아를 통해 역사적/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그는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굳이 국제적인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라 리비아 민중의 자기해방 능력에 대한 불신도 드러낸다.

결국 최 위원의 주장은 민중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룰 가망이 없으니 강대국 군대가 강제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존재인가.

냉전 이후 서방 강대국들은 패권적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들먹여 왔다. 이른바 ‘인도주의 개입’론은 소말리아, 코소보와 세르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해 왔다.

인도적 재앙

그러나 현실과 명분은 달랐다. 제국주의 군대는 ‘인도주의 개입’ 때마다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도적 재앙에 빠뜨렸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듯이, 제국주의 점령군은 이곳들에서 카다피보다 더 끔찍한 것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들이 제거하겠다고 했던 후세인, 탈레반, 알카에다 등은 모두 미국이 키운 악당들이었다.

지금 카다피가 사용하는 무기들도 죄다 서방이 판매한 것이다.

최 위원의 주장처럼 리비아에서 ‘보편적 인권과 반제국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카다피는 후세인의 몰락을 보며 미국

이른바 ‘인도주의 개입’론은 소말리아, 코소보와 세르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해 왔다.

에 항복했고, 그 뒤에는 서방 정부들과 유착해 왔다.

이런 상호 유착 때문에 혁명 초기 서방 국가들은 카다피 비판을 애써 피했다. 지금 그들이 군사 개입을 망설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발륙이 잡혀 개입할 지상군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개입이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서방이 군사 개입을 한다면 그 목표는 강대국들의 패권과 석유 자원 확보이지 리비아의 민주화가 아니다.

이 때문에 리비아 혁명 세력의 ‘전국위원회’는 일단 서방의 지상군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문제에서는 혼란 스런 입장을 내면서도, ‘외국 군대의 주둔’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끔찍한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에 있고,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방이 군사 개입을 시작하면 ‘저항세력’은 서방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라는 카다피의 악선동에 오히려 힘이 실릴 것이고, 혁명 세력은 분열할 것이다. 일단 발을 들여 놓은 서방 군대는 ‘안정’과 ‘평화’라는 이름 아래 리비아의 모든 국내 세력과 석유 자원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친미독재 국가들을 위협하는 민중 반란 물결을 분쇄하려 할 것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끔찍한 재앙과 비상이 펼쳐질 것이다. 제국주의 군대는 결코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혁명은 민중 스스로 자기 해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리비아 민중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서방 강대국들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치어리더가 돼선 안 된다.

김문성



리비아 혁명의 주역들 이들의 자기 해방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도 서방에 반대해서 카다피같은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도 잘못됐다

카다피와 서방은 공범 관계였다

한국에서 일부 자유파 인사들은 카다피를 반제국주의 지도자로 묘사해 왔다. 반대로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카다피의 독재가 서방의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대립해 왔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둘 다 진실이 아니다.

카다피는 한때 제국주의와 같등하고 그것으로 독재를 정당화했지만, 이미 2003년부터 태도를 바꾼 제국주의에 빌붙어 왔다.

미국은 그 대가로 2004년 리비아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2006년에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 과정을 중재한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리비아가 서방과 돈독한 파트너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미 국무부 대변인 슌 맥코믹도 “리비아는 … 미국과의 물론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발전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서방 지배자들은 카다피를 “지역의 실력자”로 부르며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리비아의 석유 자원 수입, 유전 개발과 각종 건설 투자, 무기 수출 문벌에 나섰다.

카다피도 화답했다.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정부에게 유전 개발 등 지역의 사업권을 줬고,

자유시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다피는 2008년 ‘혁명’ 39주년 연설에서 “내년 초부터 자유시장 경제 조치들을 도입한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위선

2004년 영국 블레어,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2008년 미 국무장관 라이스가 리비아를 방문해 카다피와 회견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블레어는 회담과 동시에 영국계 석유 기업 셸과 BP의 석유 탐사권을 확보하고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시위 진압 장비 등도 판매했다.

영국은 리비아 장교들을 영국사관학교 샌드허스트에서 교육시키고 군사자문단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리비아를 식민 지배했던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리비아에 무기

를 가장 많이 팔고 있다. 2007년 정상회담 후 프랑스도 원자로와 비행기, 군수물자 등을 1백억 유로여치 판매했다.

전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2008년 리비아 방문 때 카다피에게서 20만 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았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 전망에 매우 흥분해 있다”고 카다피에게 전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2009년에는 카다피를 G8 회의에 초청했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서방과 카다피 모두 위선자인 것이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카다피가 저항 세력을 학살하도록 무기과 돈을 제공한 당사자들

카다피가 ‘주권’을 말하는 것도 위선이다. 그가 해외에서 용병을 불러들이는 데 쓰는 돈은 막대한 석유개발 이익을 독점해 다국적 기업들에게 나눠 준 대가로만 온돈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중동을 순

방하며 무기 세일즈를 한 직후에 카다피의 학살을 막아야 한다’며 위선을 떨었다.

그가 “영국이 아랍 정상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동안 리비아 학살 동영상에는 영국제 장갑차가 진압에 사용되는 장면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네오콘’ 리처드 필은 세계적 전설팅 기업을 모니터그룹 소속으로 연간 3백만 달러를 받는 카다피 자문료에 참여해 왔다.

오바마 정부도 바로 몇 달 전에 카다피와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했다. 카다피는 ‘테러와의 전쟁’을 돕겠다며 미국의 전투기, 헬기, 탱크를 수입해 왔다.

결국, 카다피는 반제국주의이기는커녕 제국주의에 빌붙어 온 독재자일 뿐이고, 서방은 카다피의 독재와 학살을 도와 준 공범들이다.

김문성

은근히 독재자들을 비호하는 한심한 주장들

국내에도 중동 혁명에서 서방 음모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진보진영 논자들(주로 자주파들이)이 있다. 그들은 리비아 혁명만이 아니라 튀니지와 이집트마저도 외부 세력에 조종당한 폭

두각시들의 반혁명으로 규정한다.

그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칭화대 정기열이 <진보정치>에 기고한 글이다.

그는 “튀니지, 이집트 독재자들의 분신인 군부세력이 권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번 혁명이 알고 보면 미국이 계획한 반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수십 년 외세 지배세력이 이번 아랍혁명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30년 쯤된 하수인” 무바라크를 제거한 동기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같은 조직화된 민중 정치세력에 의한 혁명적 분출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정기열의 주장에서 의아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빈민뿐 아니라 몇몇 지방한 백만장자들을 회원으로 가진 모순적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지도부는 ‘혁명적 분출’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혁명 때도 처음에는 시위에 공식 참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기열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혁명은 그동안 무슬림형제단을 집중 탄압해 온 이집트의 친미 독재 정부를 약화시켜 무슬림형제단이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이 열려 주었다.

미국은 반무바라크 투쟁이 승리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기열의 주장과 달리 이번 혁명을 사주하기는커녕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기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집트 청년 세대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적개

심이다. 그는 그들을 “배후에서 원격조정이 용이한 ‘젊은 인터넷 세대’라고 부른다. “미국화면” 혹은 ‘서구화된 젊은 세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청년 세대를 싸잡아 친서방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 나도 사용한다 — 친서방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동 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음모로 보는 또 다른 입장으로

한호석의 주장이 있다. 그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혁명이나 사회변혁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친미독재정권의 급진적 세대교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며 정기열과 대조소이한 주장을 한다.

설상가상

그는 “리비아의 무장반란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리비아 무력침공 계략에 말려드는 치명적 실책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카다피 항쟁을 지지하면서 서민 몇몇만 백만장자들을 회원으로 가진 모순적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지도부는 ‘혁명적 분출’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혁명 때도 처음에는 시위에 공식 참가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한호석은 심지어 카다피 정권이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저항세력을 살살 다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카다피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지금 리비아가 미국군의 무력침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리비아군은 당장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다. 진압 작전을 주저하는 까닭은, 미국이 리비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이라는 유언비어를 국제사회에 날조, 유포하면서 리비아를 반드시 무력침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서방 정부의 개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리비아군은 이미 대거 저항세력으로 넘어

갔고 덕분에 뱅가지가 해방됐다.

게다가, 카다피는 민간인 대량학살이란 딱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월 9일 알자지라는 카다피의 반격으로 “최소한 수백 명 — 어쩌면 수천 명 — 이 죽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자주파에 속하는 임승수는 ‘중동의 인민항쟁’을 보며 드는 몇 가지 단상’이라는 글에서 “중동의 인민항쟁”을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미국 일국체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항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승수는 리비아 항쟁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

그가 공저한 <미국에 맞짱을 뜬 나쁜 나라들>이란 책에서 “리비아의 경우는 주변 국가들을 묶어서 반제국주의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 했으면서 우호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짧은 언급은 이 책에서 리비아에 관한 장을 쓴 장호열의 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리비아 국민들은 … [카다피의 ‘제3세계 이념’ 덕분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 단순한 해수여가 아닌 사회적 독자성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누리는 국민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리비아가 내전으로 돌입한 지금 이 순간, 이런 주장의 공허함을 굳이 지적할 필요가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반미’라는 이유로 기존 국가들에게 진보의 가면

을 씌워주는 것은 그만의 문제제 아니다. 이런 입장은 반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체제에 대한 국제 노동계급의 반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또, ‘반미’라는 이유로 독재국가와 독재자까지 옹호할 뿐 아니라 그것에 맞선 민중 저항을 반대하는 입장

에서는 최악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진다.

김용욱

중동 반란이 지도부가 없는 항쟁인가?

이집트 혁명 등 중동의 민중 반란이 ‘지도부가 없이 대중의 자발성에만 의존한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라는 주장이 많다. 많은 언론과 지식인,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가 대표적이다.

자율주의자인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도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단일한 중심 지도부가

없는 수평적 네트워크”라며 중동 민중 반란을 설명했다. 이것은 지금의 반란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행한 구실에 주목하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나아가 운동을 건설하는 데 조직이나 지도부는 불필요하거나 해롭다는 주장과도 연결돼 있다.

그런데 지도부·지도력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이다. 바로 한국에서 2008년 촛불항쟁 때도 우리는 ‘지도부 없는 자발적 운동’에 대한 찬양을 거듭해서 들었다.

물론 이번 중동 반란에서 인터넷이 어느 정도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이 인터넷에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혁명은 있었다.

한 논평가는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은 트위터의 도움 없이도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했으며,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당원들은 겨울공진회를 점령하며 가는 길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려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번에도 이집트 무바라크 정부는

김문성

또, 중국 정부는 수많은 미국 기업이 때로는 직접 투자로, 때로는 하청 기업을 통해 중국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해 때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는커녕 독립 노조 결성과 파업을 억누르는 등 적극 도왔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진정한 반자본주의 및 반제국주의 운동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것이다.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논리는 결코 진정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의 운동을 건설하는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없다.

김용욱

최근 차베스와 일부 라틴아메리카 좌파 민족주의 정부들은 리비아 혁명 세력을 지지하길 거부했다.

또,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외 무장관들과 니카라과 부통



령이 카다피와 반카다피 세력 사이를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석유 이익을 노린 서방의 리비아 개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

그러나 민중이 카다피를 몰아낼 권리를 존중하면서 서방 군사 개입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좌파 민족주의 정부들은 ‘배후가 의심된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그들은 리비아 혁명은 미국과 서방이 카다피를 제거하고 리비아 석유를 차지하려고 일으킨 반혁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재를 통해 카다피가 자기 자리

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으려 한다. 혁명의 확산을 저지하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 민중의 급진화에 힘입어 집권했고 때때로 반자본주의적 발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격려하지만 여전히 기존 자본주의 국가의 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이 모순이 나타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는 코카콜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그러나 같은 순간 차베스 정부의 검사는 국영 철강 기업에서 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가들을 고발했다.

쿠바의 경우 더는 이런 긴장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당 독재 체제로 굳어진 지 오래다. 쿠바 정부는 얼마 전 공무원 50만 명 갑원 개혁을 발표하는 등 시장 개혁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외부 세력’

이번 좌파 민족주의 정부들의 문제점은 국제 관계에서 훨씬 노골적으로 표현돼 왔다. 그들은 주로 기존 정부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자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미국과 같등을 빚는 이른바 ‘반미 정부’라면 그 나라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비판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옹호하는 문제를 낳았다.

차베스는 2007년 티베트 항쟁 때 이것이 ‘외부 세력’의 개입 때문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고, 2009년 이란에서 대선 부정 의혹에 항의하는 투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차베스가 옹호하는 대표적 ‘반미’ 국가들 —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 은 모두 권위주의 정부로 그들은 기업주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을 억압해 왔다.

게다가, 이렇게 그들을 옹호한다고 해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른바 ‘반미’ 정부들은 일관되게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거래를 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2001년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열강을 중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 국무부

는 해외의 신장 위구르 민족해방 운동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김문성

또, 중국 정부는 수많은 미국 기업이 때로는 직접 투자로, 때로는 하청 기업을 통해 중국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해 때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는커녕 독립 노조 결성과 파업을 억누르는 등 적극 도왔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진정한 반자본주의 및 반제국주의 운동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것이다.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논리는 결코 진정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의 운동을 건설하는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없다.

김용욱

김문성

실제로 이집트에서 1월 25일 대규모 시위를 건설한 과정을 보면 ‘조직이나 지도부’가 없었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25일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은 노동권 방어 단체, 무슬림형제단, 야당과 연관 있는 6개 청년단체의 대표들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찰과 당원들을 겨울공진회를 점령하며 가는 길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려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집회 전 2주 동안 날마다 모여 집회 성공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시위

김승현·전지윤

중동에서 연속혁명이 이미 일어났는가?

〈레프트21〉 51호 1면 헤드라인은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어서 중동의 독재자들이 연쇄적으로 타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를 “중동의 연속혁명”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그 단어가 단지 혁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뜻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혁명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용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트로츠키가 정식화한 연속혁명론의 첫째 측면은 노동계급이 아직 인구의 소수인 상대적 후진국에서조차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계급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부르주아 민주주의 변혁과 사회주의적 변혁을 연속적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 여부다. 러시아에서도 독재자 짜르를 타도했던 1917년 2월 혁명은 정치 혁명이긴 했지만 아직 연속혁명이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변혁(농민들에게

토지 분배,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 보장 등)와 사회주의적 변혁을 동시에 수행한 연속혁명은 인구의 소수였던 노동계급이 농민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한 10월에서야 비로소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중동의 혁명은 아직 연속혁명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연속혁명의 둘째 측면은 어떠한가? 연속혁명론의 둘째 측면은 국제적으로 노동자 혁명이 확산돼 몇몇 선진국에서 노동자 국가 수립이 성공해 그곳의 도움을 얻어야 상대적 후진국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이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동에서 독재자들을 타도하는 혁명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것은 연속혁명 이론의 타당성을 훨씬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연속혁명의 둘째 측면을 정식화한 것은 혁명 중에도 노동자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혁명의 확산

만인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작한 상대적 후진국에서 그 변혁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 중동 혁명 상황을 연속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자 권력

연속혁명 사상은 스탈린주의자들의 단계혁명론과 일국 사회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후진국에서는 생산력 수준이 낮아 당장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구할 수 없으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변혁만 수행해야 한다는 단계변혁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전략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어했다.

일국적 관점에 기초한 스탈린주의자들은 국제 혁명 노선을 버리고, 소련 국가 방어를 명분으로 각국 공산당들에게 자본가적 정치 세력과의 동맹에 노동계급의 실천을 종속시키는 인민전선 전략을 종용했다.

반면 연속혁명론은 1917년 10월 혁명과 그 여파로

1918~23년 오스트리아·이탈리아·헝가리·독일 등에서 노동자 혁명이 확산됨으로써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서유럽에 확산된 노동자 혁명은 실패했다. 서유럽에서는 오랜 노동계급 투쟁 과정에서 훈련되고 노동계급 조직에 광범하게 뿌리를 내린 러시아의 볼셰비키와 같은 혁명적 조직이 저발전했기 때문에 그 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 혁명은 고립돼 변질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탈린의 반혁명을 통해 혁명의 성과가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렇듯 연속혁명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다. 권력 장악을 향한 노동계급의 자기 의식적 행동이 열쇠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지난 호 〈레프트21〉 헤드라인은 마치 현재 중동에서 연속혁명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게 해, 연속혁명이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정병호

사노련 방어 집회 참가기

의미있는 집회, 아쉬운 구호

3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탄압 방어 집회가 열렸다. 나는 오세철·최영익 씨 등 탄압을 받은 당사자들의 발언에서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은 정권의 레임덕이 심해질수록 탄압도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면, 국가보안법이 친북이건 반북이건 좌파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쌍용차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 연대하며 자본주의의 대안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탄압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역시 이 판결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사회주의

자들의 투쟁으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회주의 쟁취하자”고 외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 개별 참가자들의 발언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했지만, 사회자의 발언은 특히 그 집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나는 집회에 오기 전에 다른 학생에게 집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방어한다는 관점에 동의했다. 비록 당일 일정이 생겨서 그 학생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참여했다면 그 구호가 그 친구에게는 불편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는 사회주의자들만의 결의대회가 아닌 광범한 연대의 장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무석

미국의 리비아 개입에 반대한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축출을 위한 미국과 영국의 개입을 놓고 이것이 인도주의적 개입과 제국주의적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염증을 느끼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또 다른 버전을 한다고 한들 반미 정서가 강한 아랍권에서 그런 행태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여력이 없는 미국이 현실성 없는 개입을 하는 무리수를 돌지도 의문인데다 유엔이나 나토에서도 이런 발상을 환영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중동 혁명에 대한 제국주의의 대응이 지금까지와 달리 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의 수반하려고 한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동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제국주의에 어떻게 반대하는 것이 옳은지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의 개입은 리비아 혁명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미국의 개입 계획에 대한 입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급진좌파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부시나 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오바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느낄 수 없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오바마의 리비아 개입을 보면서 일말

의 진정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반미 정권’을 자임해 온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카다피와의 우정’ 같은 수사까지 동원하며 사실상 독재를 옹원하고 심지어 중동, 리비아 혁명을 미국이 조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중동 혁명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있다.

미국의 리비아 개입을 반대한다는 나의 결론은 차베스와 같다. 하지만, 나는 차베스가 개입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

제국주의나 다수 언론들은 민중에게 독재 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묘사하면서 외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국 진보진영 내에도 리비아 민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봐서 그들의 반란이 조종됐다는 식의 잘못된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중동 혁명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극악하고 부패한 신자유주의 정부를 몰아낸 혁명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민중의 통쾌한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리비아의 어느 반정부 시위자의 말은 독재와 싸우면서도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석유에만 관심이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차경운

‘안심 보육’, CCTV가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대안이다

보육교사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까?

영아의 경우 세 명당 보육교사 한 명이 배치되므로 세 쌍둥이의 엄마나 다름 없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의 경우 스무 명당 보육교사 한 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과부하인데 2008년 이후부터 아동정원 초과를 특례로 인정하는 지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 이런 보육조건은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환경이라 볼 수 없다.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아이 한 명에게 쏟는 애정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정부가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돌봄과 교육을 겸하는 동시에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행사 준비, 보육시설 평가



3월 5일 세계 여성의 날 집회에서 보육 노동자 요구를 알리는 노동자들

를 위한 준비 그리고 원장의 입맛에 따른 온갖 잡무를 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보봉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을 하고 있다. 현재의 어린이집 보육체계는 보육교사들에게 쥐야 할 인건비를 줄이고, 아이들은 많이 수용한다. 이것은 보육조

차 돈벌이의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육교사 72.5퍼센트가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

성공회대는 비정규직 행정직원 해고를 철회하라

‘진보대학’이라고 알려진 성공회대학교가 각 학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일곱 명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했다. 그리고 남은 계약직 행정직원 세 명도 몇 달 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행정직 직원들은 대부분이 학교 졸업생들로, 그동안 2년짜리

계약직으로 성공회대학교 각 학과, 학부의 행정직 업무를 맡아 왔다. 하는 일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음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조교’ 취급을 받아 왔다.

학교 측은 정규직들이 행정업무를 맡으면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직 직원 열

명이 맡던 업무를 경험 없는 정규직 직원 세 명과 근로장학생들이 이를 맡을 경우, 3월 학사행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진보대학’임을 내세워서 많은 진보적 학생, 학부모의 지지를 받은 성공회대 학교가 다른 대학들과 다를 바 없이 비정규직 법안을 악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감스럽다.

일부 직원들이 총학생회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총학생회는 대학원 학생대표와 함께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성공

회대 자유게시판 등에 재학생은 물론 새내기, 졸업생까지 학교측의 행동을 규탄하고, 총학생회와 행정직 직원들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대학노조 성공회대지부의 경우,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흥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길 원하는 뜻있는 이들의 관심을 바란다.

김재원 성공회대학교 학생

부산대학교 학생 식당 폐쇄

이제 밥은 어디서 먹노?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정문 앞에 학생이 넘치고 학내 편의점에 줄을 길게 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 식당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밀양 캠퍼스는 심지어 유일한 구내식당이 문을 닫아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부산대는 원래 학교 식당이 네 곳인데 한 곳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사실상 세 곳이 수요를 감당해 식당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 식당에 가더라도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 한 시간 안에 밥을 먹고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교내 편의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

그런데 이 세 곳 중 한 곳마저 문을 닫은 것이다. 세 시간에 수업을 들으려면, 밥값이 비싸고 거

리가 멀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다. 요새 주변 학생들에게 “밥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영양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값싼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학교 식당이 문을 닫은 직접적인 이유는 식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다. 실제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식자재값은 지난해보다 평균 20퍼센트 이상 올랐다.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중동을 휩쓸고 있는 혁명의 한 배경에는 바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낳은 식료품 가격 인상이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한국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이런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 식당이 가격을 올리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상황을 방기한다면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립대인 부산대 당국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학교 식당을 직영화해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 국가와 대학 본부는 그럴 책임이 있다.

박준희 부산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

지난 호 권기봉 씨의 독자편지를 읽고

학생들이 단결할 수 있는 요구를 고민해야

〈레프트21〉 51호에 권기봉 씨가 기고한 ‘교육대학교 통폐합과 법인화에 맞서 싸울 때’에 대한 이견이 있다.

국공립대학(교대 포함)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일환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사범대·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고, 30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들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권기봉 씨가 주장한 것처럼 “교육 재정을 삭감”하고 “재정적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질이 희생”된다. 따라서 진보적 학생들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문제는 한발대(국립 산업대)의 학생 대부분이 충남대 졸업장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주교대를 충남대학교, 한발대 학교와 통합하는 것이 설사 신자유주의적 방식이라 하더라도 한발대생들은 대부분 통합을 지지할 수 있다. 학벌주의적 차별이 만연

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순위’ 대학의 졸업장을 따는 것이 차별한 취업 경쟁에서 약간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는 대학 학생들의 요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단결하기 어렵다. 권기봉 씨의 글에는 이 점이 나와 있지 않아 아쉽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과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방식의 대학 통폐합을 지지하지는 건 아니다. 정부 입장은 차별받는 대학의 학생들을 고려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부산대-밀양대 통합 과정에서도 등록금이 인상되고, 특정 학과가 없어지고,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는 졸업장에 학교에 따른 차등을 두는 등 불합리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발대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하면서도 대학과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요구들을 내놓아야 한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지지를 결집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자 감세 중단하고 (급증하는) 군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을 교육 재정으로 돌려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성지현

미화 노동자들이 말하는 파업 이야기

미화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 전 날인 3월 7일, 나는 연세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연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노동자 두 분과 즉석 인터뷰를 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오늘 [학교]신문에 난 것 보니까 학교는 최저임금 따라서 5.1퍼센트 인상했다고 말하는데, 엄청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급] 2백20원 인상된 거예요, 고작 4천3백20원 주면서 최고로 줬다고 말하는 행태

가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업무는 그들이 지시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나 마찬가지로요.

“애초 입찰할 때부터 [학교가] 최저임금, 이익금, 복지후생비 등을 다 결정해요. 총무처 팀장은 [지난해 점거 당시에]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어.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해야지.”

“내가 일하는 곳은 웨딩홀이 있어서 주말에 일이 많아요. 네 명이 일하면 좋은데 두 명에게만 일

을 시켜서 사실상 일이 곱배기에요. 근데도 별도로 주말수당 못 받고 있고, 주 5일은커녕 국경일에도 못 쉬고 있어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인 열악한 휴게공간에 대한 애기도 나왔다.

“자기네도 휴게공간에 가서 보면 미안할 꺼예요.

“심지어는 건물 리모델링할 때 자기네 사무실 옮겨야 하니까 우리 더러 주방을 비우라고 했었대요.”

“우리가 식사할 권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 광고까지 받았다는 〈민중의 소리〉의 타락

“민중의 소리, 삼성 광고 받아도 될까요?” 〈민중의 소리〉광고국장이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올해 〈민중의 소리〉는 “기업 광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삼성 광고를 받더라도 삼성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 공장 유가족들은 백혈병으로 자식을 잃고 피맺힌 심정으로 삼성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을 홍보하는 일이 〈민중의 소리〉가 할 일일까?

광고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홍보하는 수단이다. 만약 〈민중의 소리〉가 삼성 광고를 싣는다면 스스로 사람들에게 삼성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퍼트리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는 돈을 받더라도 정치적인 논조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한 번 실용적인 논리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점점 원칙이 모호해지고 기업에 대한 비판이 무뎌질 수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이 삼성의 재정 압박에 굴복해 삼성 비판 칼럼을 싣지 않은 일은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정

치적 문제를 낳는지 보여 줬다.

〈민중의 소리〉는 이미 기업 광고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중의 소리〉가 반쯤 벗은 여성들이 나오는 광고를 버섯이 게재하는 것을 보며, 독자들은 〈민중의 소리〉가 과연 진지하게 성상품화에 반대한다고 볼까?

일관되게 민중을 대변하려면 기업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후원에 의존해야 한다. 〈레프트21〉이 기업 광고를 받지 않고 지지자들의 후원만으로 신문을 만드는 이유다.

정선영

‘먹고살 만한 나라’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한가

‘먹고살 만한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해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내가 최근 〈레프트21〉 독자와 중동 혁명에 대해 토론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튀니지나 이집트보다는 ‘먹고살 만한 나라’ 한국, 한국보다 훨씬 더 노동조건과 복지환경이 좋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1968년에 일어난 프랑스에서의 반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연속혁명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쟁취한 다음에야 사회 혁명

이 가능하다는 단계론적 공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공식에 대해서도 반문을 던진다. 중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우리는 그리스, 프랑스에서 대중파업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 ‘먹고살 만한 보이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왜 거리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는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 갈등을 부추기며 분열 지배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한다. 한국의 지배자들도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면서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 년 된 종교적 갈등을 뛰어넘어 독재자를 물러나게 한 이집트인들의 위대한 투쟁을 봤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간절해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열쯤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월급이 튀니지 노동자들의 월급보다 더 많겠지만, 나도 튀니지의 노동자들처럼 회사에서 사장을 내쫓고 싶다. 자본주의의 온갖 착취와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라면 우리는 차이점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육오영화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서방의 중동의 민주주의와
해방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16일 (수)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410호
(2호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서방의 “인도주의적” 개입 —
누구에게 이익인가?

연사: 설의 중
일시: 3월 2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악역 4번 출구 도보 3분,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서방의 군사 개입은
왜 중동 혁명의 걸림돌인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24일 (목) 저녁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2-416-0963,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유럽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연사: 최용찬 (다함께) 활동가, 독일 베를린
경제대학 ‘세계화와 노동정책’ 석사과정 졸업)
일시: 3월 2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아랍의 민중 반란과
연속혁명

연사: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3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골든프라자 5층 대회의실
(수원역 앞 매산동 주안센터 옆)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왜 21세기에도 기아와 빈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인천
일시: 3월 22일 (화) 오후 7시
장소: 인하대학교 5동 110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서울
일시: 3월 23일 (수) 오후 7시
장소: 고려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부산
일시: 3월 30일 (수)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문의: 010-5331-1968

서울
이집트와 중동의 혁명
연사: 이수현 (개간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역자)
일시: 4월 5일 (화) 7시
장소: 국민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1920년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연설하는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

러시아혁명 : 권력을 장악하기

이집트 혁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지배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줬다. 메겐 트루멜은 1917년 러시아혁명은 그런 투쟁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동자 반란인 1917년 러시아혁명은 거의 1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준다. 러시아혁명은 지금 변화를 바라며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교훈을 준다.

러시아 혁명은 단 한 번의 영웅적 행동도, 모든 노동자가 하나가 돼 동시에 전진하는 단선적 과정도 아니었다.

혁명은 의식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모순적 의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대중이 일으키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이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개성과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혁명에는 전진도 있었지만 후퇴도 있었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급격한 국면전환도 있었다.

러시아에서 첫 번째 혁명은 1905년에 일어났다. 당시는 절대왕정이 광대한 제국을 지배했다. 대다수 농민은 거의 굶주리다시피 하면서 살았고 토지는 부유한

자들이 독차지했다.

엄청난 경제적 변화와 함께 빈곤이 공존했다. 대규모 현대식 공장들은 무기와 의류를 생산했고, 철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을 연결했다. 1890~1900년 사이에 공장 노동자 수는 1백40만 명에서 2백40만 명으로 거의 2배로 늘었다.

1904년 러일전쟁은 차르 니콜라이 2세의 굴욕적인 참패로 끝났다. 이것이 낳은 반전 정서는 임금 하락과 끔찍한 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와 결합됐다.

1905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폰 신부는 노동자와 농민을 이끌고 이들의 삶을 보살펴 달라고 차르에게 청원하려 나섰다.

차르는 군대에 명령을 내려 시위대에 발포했고 수백 명이 죽었다.

전국이 분노로 들끓고 거대한 파업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정치 모임들이 열리고 전술과 정치 사상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평생 동안 권위에 굴종해 온 노동자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오랜 세월 수용해 오던 지배 사상에 도전하고 평등을 요구했다.

대중파업은 경제적 권리 투쟁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을 결합시켜 차르 체제에 도전하는 단결된 운동이 탄생했다.

러시아혁명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강한지 극적으로 보여 줬다. 러시아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던 직종 간, 도시 간 장벽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러시아혁명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모든 노동계급을 포괄하는 민주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 러시아어로 '소비에트'가 탄생했다.

잠재력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에트와 비슷한 조직들이 등장했다. 이런 기구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 1905년 혁명 당시 사회주의 정당인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몇 달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



1917년 세계 여성의 날에 페테르부르크 시내에서 행진하는 여성 노동자들(위)과 같은 해 10월 거리 행진에 나선 병사들(아래)

다. 사상들이 변하고 노동자들은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에 눈을 떴다. 그러나 파업만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저항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1905년이 지나자, 잠시 누렸던 해방감은 사라지고 국가 탄압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방의 느낌은 잊혀지지 않았다.

12년 뒤인 1917년에는 1905년 혁명을 낳은 동일한 요인들 — 전쟁, 대중파업, 농민 반란, 소수민족 반란 등 — 이 더 강력히 결합돼 차르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제1차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러시아에서는 대규모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잠

시 주춤했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이 앙등하고 전선에서 대참사가 발생하자 더 많은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다.

1917년 2월 배급제도가 도입되자 분노가 폭발했다.

공장의 여성 노동자를 포함해 여성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병사들은 폭도에게 발포하라는 장교들의 명령을 거부했고, 오히려 노동자들과 함께 “빵을 달라”, “차르를 타도하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차르의 의회를 향해 행진했다.

수십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고 거대한 시위대는 친정부 부대와 충돌했다. 불과 이틀 만에 노동자들은 무장했고 많은 부대들이 노동자 편에 서기 시작했다.

차르는 전복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이 정부에는 주로 러시아 자본주의가 더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산업자본가들이 참여했다.

농민과 병사들의 지지를 받는 사회혁명당의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임시정부에 참여한 덕분에 이 정부는 좌파적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다.

2월 혁명으로 노동자들은 또한 자신의 힘을 깨달았다. 몇 주 뒤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은 [19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민주적으로 소비에트를 건설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 규칙과 고용 계약을 내팽개쳤고 공장 감독관을 내쫓았다. 새롭게 탄생한 정치 질서에 발맞춰 공장 질서도 변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국가기구가 해체됐고, 노동자 민병대가 경찰을 대체했다.

소비에트는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았다.

소비에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했고, 대중 의식도 크게 도약했다. 이 민주적 조직은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줬다.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나란히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 두 권력이 있고 그 둘은 불안정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뜻했다.

처음에 소비에트를 지도하던 멘셰비키는 권력 장악을 두려워했고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타협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멘셰비키 때문이었다. 이들은 러시아혁명이 고용주들이 통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에서 멈춰야 한다고 믿었다.

불균등

그러나 이 타협은 노동계급의 불균등한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소비에트는 노동계급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노동계급 다수의 정서와 견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거리 투쟁에 능동적으로 참가한 것은 노동자들 소수였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혁명에 참여했고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반드시 잘 구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은 단 한 번의 영웅적 행동도, 모든 노동자가 하나가 돼 동시에 전진하는 단선적 과정도 아니었다. 혁명은 의식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모순적 의식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대중이 일으키는 것이다.



지배계급을 전복시키려는 계급도 혁명을 통해서만
이전 시대의 오물을 제거하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왕정과 자본가들에 반대하는 사람을 선출했다. 많은 노동자가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 멘세비키에 기대를 걸었다.

볼셰비키당은 혁명의 유기적 일부였다. 많은 작업장에서 수천 명을 이끌고 거리로 나선 가장 뛰어난 투사들은 대개 볼셰비키당원이거나 지지자였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임시정부에 대한 환멸이 늘어났다. 임시정부는 전쟁을 끝내지도 않았고, 농민들의 토지 점거도 금지했다.

게다가, 멘세비키가 임시정부를 떠받치고자 정부에 입각하자 노동자들은 멘세비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소비에트를 지지하기 시작하자, 소비에트 내에서도 멘세비키를 대신해 볼셰비키의 지지가 늘었다.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혁명은 계속 발전했다. 1917년 7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대중은 소비에트의 멘세비키 지도자들에게 권력 장악을 요구하는 무장 시위를 벌였다.

당시 임시정부를 몰아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었지만, 볼셰비키는 [당장 권력을 잡기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아직 다수의 노동계급이 반혁명에 맞서 권력을 장악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을 포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기를 일으키면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었다.

악랄함

볼셰비키는 악랄한 탄압을 받았다. [볼셰비키] 당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지배계급은 근심이 가득했다. 우익 장군인 코르닐로프는 8월 소비에트와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수에 그친 쿠데타를 감행했다. 볼셰비키는 당시 총리였던 케렌스키를 방어하려고 대중을 조직했다. 대중은 혁명을 방어하고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 철도 노동자들은 철로를 해체해 쿠데타 군의 이동을 저지했

다. 전신 노동자들은 코르닐로프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는 하락했다. 8월 말이 되자 볼셰비키는 예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리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지도부가 됐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늘자 볼셰비키는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임시정부 청사인 동궁은 별다른 무력 사용 없이 접수됐다. 대다수 노동계급이 소비에트의 볼셰비키 지도부를 완전히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는 “신중하고 힘들게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볼셰비키를 지지하게 됐다. 10월이 되자 노동자들은 [권력 장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본 상태였다. 특히, 노동자들은 쿠데타 시도를 보면서 판돈이 엄청나게 큼을 깨달았다. 노동자들은 혁명이 전진하지 않으면 처참하게 분쇄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1905년 혁명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했다.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는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만약 볼셰비키가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의 [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 혁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당은 계급을 대체할 수 없다.

러시아혁명을 일으킨 것은 볼셰비키가 아니었다. 볼셰비키는 노동계급이 파편성과 불균등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일상 투쟁과 자본주의를 종식시킬 가능성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줬다.

볼셰비키의 슬로건인 “빵, 평화, 토지”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는 가장 전 투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표현한 것이었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이 구호들을 지지하게 됐다.

1920년대 스탈린의 반혁명은 러시아혁명이 이룩한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1917년 혁명은 오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아래 살면서 모든 노동자가 동시에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행동이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도전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계급이 불균등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배계급을 다른 방식으로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배계급을 전복시키려는 계급도 혁명을 통해서만 이전 시대의 오물을 제거하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번역 천형석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책으로 보는 중동의 반란과 혁명

신간 서평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이집트 사회주의자 외, 책갈피, 176쪽, 8천 원

이집트 혁명의 진로를 제시하는 나침반

사해 벽두부터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으로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격랑이 일고 있다.

중동은 세계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석유의 최대 매장지이자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따라서 중동의 정치적·사회적 격변은 국제 정치·경제 체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책은 21세기에도 혁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중동의 민중 반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 혁명의 배경을 심층 분석할 뿐 아니라 혁명의 미래를 전망하며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민중의 염원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속혁명론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중동의 혁명과 반란에 대한 주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논평은 피상적이고 아전인수 격인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염원이나 기대를 현실과 섞어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튀니지 혁명 후 이집트는 다르다며 한결같이 무바라크 정권의 건재를 점쳤던 주류 언론의 보도가 단적인 예다. 그러나 무바라크

정권은 튀니지의 벤 알리 정권보다 더 빨리 무너졌다.

심층 분석

이 책에는 이집트 카이로의 사회주의연구센터 회원이자 타흐리르광장 시위가 한창일 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 이집트 혁명의 소식을 전하며 맹활약한 언론인 호삼 엘하말라위, 오랫동안 중동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을 심층 분석·추적해 왔을 뿐 아니라 이번 이집트 혁명을 현지에서 직접 보도한 영국 <소셜리스트 위크> 편집자와 기자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대인 사회주의자로서 중동 문제 전문



가인 존 로즈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중동의 격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훌륭한 나침반 구실을 할 수 있는 필독서라 하겠다.

이수현



사진 제공 Sarah Carr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09》, 크리스 하먼, 책갈피, 128쪽, 4천9백 원

이슬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이집트에서 친미 독재자 무바라크가 몰락하고 무슬림형제단이 유력한 대안 세력 중 하나로 부상하자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1978~79년 이란 혁명의 악몽을 떠올리며 곤혹스러워한다.

당시 이슬람주의의 성장을 보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지 우파와 자유주의 지식인들만이 아니었다. 좌파도 혼란에 빠져 흔히 양극단의 잘못을 저질렀다.

한 극단은 이슬람주의를 반동의 화신, 파시즘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 완전히 적대하는 태도였다.

그 결과 대중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슬람주의에 대항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동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반대편 극단은 이슬람주의를 모종의 진보주의로 여겨 거의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였다. 이런 혼란 때문에 중동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럭저럭 좌파를 제압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크리스 하먼의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모두 비판하며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슬람주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핵심 계급 기반은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모순)은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분석하며, 사회주의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규칙 (“가끔 이슬람주의자들과 함께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를 제시한다. 이슬람주의를 대하는 태도 문제는 오늘날에도 중동과 전 세계의 좌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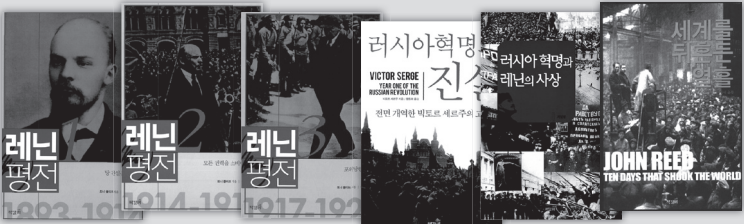
예컨대, 프랑스 국가가 소녀들의 hijab 착용을 금지하자 일부 좌파들은 그 조치를 지지했는데, 이것은 반전 운동의 분열로 이어졌다. 반대로 지난해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국내의 일부 좌파들은 이란 정부가 ‘반제국주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시위대를 비난했다.

크리스 하먼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게 도와 줄 것이다.

김태훈

더 읽어볼 만한 책

- 《레닌 평전》 1, 2, 3 토니 클리프 저 / 최일봉 역 / 책갈피
- 신간 《러시아혁명의 진실》 빅토르 세르주 저 / 황동하 역 / 책갈피
- 《세계를 뒤흔든 열흘》 존 리드 저 / 서찬석 역 / 책갈피
-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최일봉 저 / 책갈피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①



착취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하려는 독자들을 돕고자 이번 호부터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들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소유한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회, 즉 계급으로 나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계급 사회는 20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에서 기껏해야 5천~1만 년 전부터 등장했다.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한 집단(지배계급)은 그렇지 못한 다수 대중이 생산한 부를 빼앗아 갔는데, 이를 착취라 한다. 고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사원 등 찬란한 문명도 이런 착취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배계급은 착취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고안해 냈는데, 국가·법률·도덕 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착취는 사회 제도와 법률 등으로 구조화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 사이의 약탈이나 노략질 등과 다르다.

모든 계급사회에서 착취가 있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소유주는, 닭 주인이 달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듯이, 노예들의 생산물을 소유했다. 노예는 그저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의 봉건 제도 하에서 농노들은 토지를 보유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소유했지만, 그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영주에게 지대(地代)를 납부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착취 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노예나 농노들이 노예 소유주나 영주에게 착취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착취는 다르다. 노동자들이 일을 한 대가로 사장들에게 임금을 받는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처럼 보인다. 만약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거래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일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공장·기계 등을 소유한 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장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가치를 임금으로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들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리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그 다음 달에 일을 할 수 있는 물리적·도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지만, 노동자들이 그 다음 한 달 동안 실제로 창출하는 가치는 월급보다 더 많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착취가 일어나지만 그 전 사회와 달리 은폐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착취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선진국과 후진국,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차이에 따라 착취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착취는 일부 불행한 노동자 집단에서만 벌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동자들 모두 겪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은 성별·인종별·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임금 인상은 착취를 완화해 주긴 하지만 착취를 근본적으로 없애진 못 한다. 자본주의가 끝장나지 않으면 착취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정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간판공약이었다. 부유세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부유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간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면 부유세라고 하면 금방 알아 듣는다. 가진 만큼 세금 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정희 대표의 방안은 기존 부유세 방안보다 명백히 최상위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의 양을 줄인, '결과적'으로도 후퇴다.

이런 후퇴가 노동자들이 복지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적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정희 대표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조세 저항

이정희 대표가 우려하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 목적과 세금 부담 대상이 분명한 부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81퍼센트가 부유세를 지지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물론 재벌, 조중동, 집·땅 부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강력한 조세 저항을 벌일 것이다. 그런 조세 저항을 막고 부유세를 관철시키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그런 투쟁을 건설할 생각은 않고,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려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세금도 같이 올리는 '보편적 증세'를 기웃거린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노동자 투쟁 건설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이정희 의원이 강조하는 '유연한 진보'가 부유세 후퇴를 뜻해선 안 된다. 이정희 의원이 교훈으로 삼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득권 세력에게 거둬 타협하고 후퇴한 결과였다.

이정희 대표는 이런 실패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권영길 의원의 비판처럼 “부유세의 '정신'이 아니라, 부유세 정책을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유병규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최근 김규항과 진중권이 <한겨레> 지면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김규항의 지극히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연호, 조국 선생이 얼마 전 낸 <진보집권플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책이다. 과연 그런 정권교체가 '진보집권'인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삶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권교체를 진보집권이라고 하는 건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폭력”이라고 옳게 비판했다.

김규항이 예를 든 것처럼 전북 지역에서 전주시장, 전북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민주당 안에서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모순이다.

김규항이 진정으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민주당연합 때문에 이런 민주당을 비판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예컨대 전북 버스 파업에 대해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 한 번 내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동당 전북 지역 당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문제로 발전시켜 민주당을 압박하려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도 제대로 맞서기 힘들다. 민주당연합의 논리가 결국 한나라당에 맞서는 데에도 결집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진중권은 “좌파” 딱지를 허락받고 써야 한다면 차라리 반납하자”며 김규항의 이런 타당한 제기를 희화화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맨땅에 헤딩하며 진보정당을 만들[고] ... 선거 때마다 표 분산시킨다고 몰매를 맞았다”며 김규항에게 “이 모든 번거로움을” 알기나 하냐고 으악지른다.

그러나 진중권은 그런 말할 형편이 못 된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기 4년 전인 2004년에 이미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2008년에 민주노동당 분당을 지지한 그는 최근 “앞으로 진보 같은 거 안 할 [것]”이라며 진보신당에서도 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보정당 건설의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급진좌파에 대한 적대감을 앞세웠다. 지금의 진중



민주당이 전북버스파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중앙당 차원의 논평하나 없다는 건 선거연합의 정체를 보여 준다”. (김규항, 3월 2일 <한겨레> 칼럼)

권은 정치적으로 좌파나 진보보다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일부 인사들과 더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진보 행세하는 개혁”을 저리 옹호”하는 것이다.

김규항은 “이명박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연합을 [기본으로] 찬성한다”

고 하면서도, 지금의 민주당연합은 “개혁우파 세력의 집권욕에 진보정치의 자원과 가능성을 헌납하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가 정당과의 선거연합이 낳을 수밖에 없는 결과다.

물론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에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투표했다.

그 심정은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심정’하고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그런 대중의 발길을 돌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물론 진보 후보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대중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선거만 바라보며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에 맞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런 요구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장호중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3월 21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비정규 투쟁 지지 연설하는 정동석 동지

비정규직과 연대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나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12월 8일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실시한 ‘비정규직 연대 파업 찬반투표’ 날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당시 나는 투표 시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연대 파업 찬성표를 던집시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반포했다.

나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점거파업에 들어갔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정규직의 연대를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집회나 대의원대회 때는 월차나 조퇴를 내서 연대 활동을 했다.

나는 연대를 회피하는 정규직노조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정규직 대의원·현장위원 들을 상대로 연대 파업 지지 서명을 조직하기도 했다.

사측은 이런 나의 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긴 것이다.

사측의 의도는 명백하다. 표적 탄압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이미 정규직 대의원 6명을 고소·고발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했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을 받아 별 것 아니라고 여겨서 사측 관리자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겠다’는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명백히 부끄러운 실수다.

고압제도, 주변 동료 몇 명이 “이 문제를 방지하면 이후 현장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조언해줬다. 그래서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4공장 전체 현장조직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내 문제를 받아 안고 싸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사측은 나에게 징계를 철회하고 정규직 대의원 6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동석 현대차 정규직/ 4공장 차체4부 현장위원

동국대

단호한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낮춘 학생들

동국대가 전국 최고의 등록금 인상(4.9퍼센트)을 강행했다가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쳐 한발 물러섰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방학 중에도 학내 홍보전·기자회견·집회 등을 열었다. 신입 총장의 취임식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항의했다.

올해 초에 동국대 미화 노동자들이 점거 투쟁 끝에 승리했던 것이 등록금 투쟁을 고무했다. 미화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집회에도 동참해 연대를 보였다.

투쟁의 정점은 2월 24일에 진행된 입학식이었다. 동국대 학생 대표자들은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신입생들에게 알려려고 입학식 행사 단상에 오르려 했다. 이를 교직원들이 제지하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단상에서는 오르려는 학생회장들과 교직원 사이에, ‘등록금 동결’ 요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려는 학생들과 제지하는 교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신입생들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지를 뚫고 단상에 오른 총학생회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대학 당국은 음악을 크게 틀어 이를 제지하려 했다. 그러자 신입생들 사이에서 “음악 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음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려려고 입학식 단상에 오른 학생 대표자들. 이를 지켜 본 신입생들은 ‘등록금 동결’ 구호를 외치며 뜨겁게 호응했다.

악은 꺼야 했다.

신입생들은 총학생회장의 주장에 지지를 보였다. 투쟁에 참가했던 한 단과대 학생회장은 “학내에서 몇 천명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다. 등록금 동결 구호를 신입생들이 함께 외치던 그 광경은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동국대 당국은 등록금 인상률을 2.8퍼센트로 낮추겠다고 물러섰다.

이후 새내기 배움터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다. 총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이 투쟁해서 등록금을 낮췄다면, 나

머지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동결시켜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 개강에 맞춰 ‘등록금 동결, 교육 환경 개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학내외 단체가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천막을 쳤다. 3월 11일에는 다른 대학들과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당국은 투쟁이 확대될까 봐 개강하자마자 낮춘 인상률만큼 환불해 줬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을 인하를 넘어 동결을 연어내려면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유병규

전북 버스 파업

‘대체 버스’ 저지 투쟁을 지속·강화해야

90일 넘게 지속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수세에 몰린 전북 버스 사측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합동 공세를 시작했다.

사측은 3월 9일 전투 경찰 2천5백여명의 도움을 받아 대체 버스 투입을 위한 차량을 또다시 탈취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3월 12일 전국에서 간부 2천여명을 조직해 파업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측의 총전 노릇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굶힘 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 버스 운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데 나서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3월 2일 새벽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체 버스 운행을 운모으로 막아섰다. 이런 실력 행사 때문에 제일여객에선 운행을 준비하던 50여대의 대체 차량 중 10여대만 운행됐다. 파업 노동자들의 설득으로 대다수 비조합원



3월 9일 경찰 침탈로 농성장에서 끌려나오는 노동자

들은 대체 버스 운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2월 25일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3천여 명이 참가해 연대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동안 대체 버스 투입을 사실상 저지했던 지역 시민단체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로

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측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 단체들은 촛불시위 등을 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동영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런 압력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권 환수’와 ‘버스 공영제 실시’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대체 버스 운행을 막아서 사측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도 더 조직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지역 단체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도 사측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 더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이병무

현대중공업

“살인적 노동자 테러에 무릎꿇지 않겠다”

김석진은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다.

그는 2009년 1월 1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 연대해 정규직 노동자 대표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었다.

심야 11시 30분경, 복면한 현대중공업 경비대 50~60여 명이 농성장에 쳐들어와 소화기를 뿌리고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김석진을 테러했다. 김석진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농성장과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농성 물품 모두를 불태워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주변에는 경찰 30여 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비대를 제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심야 테러 몇 시간 후 경비대들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승용차 20여 대에 나눠 타고 유유히 공장문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2009년 국회 진상조사와 경찰청 국정감사, 2010년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지만, 가해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싸우고 있는 김석진의 정신과 육체는 점점 황폐해

지고 있고, 그의 가족 또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노무관리자들의 자택 감시·미행,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경찰·검찰·법원의 조사와 재판, 동료들의 왕따,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등 총체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사측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정몽준 의원을 상대로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김석진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진은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살인적인 노동자 테러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에 노동자 식칼 테러로 지탄받은 세계일류 조선소, 현대중공업의 김석진 테러와 이를 방관하는 대한민국 경찰.

21세기에 더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테러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사측과 정몽준에게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를 조직해 나가자.

현대 미포조선 노동자

한진중공업

돌파구를 열려면 자기 제한적 전술을 벗어나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전면 파업을 벌인 지 70일이 넘었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공장 한쪽에선 파업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는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점거파업 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하는 활동가들이 있지만, 이들도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2월 전면 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중단시킨 뒤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그런데 노조 지도부는 이런 자신감을 스스로 허물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이 수백 명 해고됐지만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설계 부문 외주화, 울산공장 전환배치 등 지속적인 공격에도 변변한 반격을 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방어하고 관리자들을 압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올해 1월 대량 해고에 맞서 전면 파업을 시작할 때도 기회는 있었다. 점거 투쟁으로 조업을 중단시켰다면, 이윤에 타격을 줘 파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점거파업은 경찰 투입의 빌미가 되고 고립될 수 있다’며 정면 대결을 회피했다.

수수방관

노조 지도부는 이데올로기 전선에서도 수세적으로 대처했다. ‘공장 폐쇄를 막아 부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다보니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논리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었다.

현장 조직과 활동가 들도 이런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를 주저했다.

적잖은 활동가들은 ‘내부 분열은 안 된다’며 자신의 무기력을 정당화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노조 지도권을 쥐고 있을 때도 제대로 싸움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다.

요컨대, 한진중공업 파업이 교착 상태에 이른 것은 노조 지도부의 자기 제한적 투쟁 조직과 좌파 활동가들의 정치적 취약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민중의 소리〉가 생산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특이한 파업”을 무비판적으로 치켜세운 것은 적절치 않다. 일부 좌파들은 이런 쓰디쓴 진실을 말하기보다 그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한진중공업 투쟁을 다루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필리핀 수빅조선소(한진중공업 소속)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도 타당치 않다.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 연대 논리를 내세워, 한진중공업 투쟁의 당면한 핵심 과제를 흐리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은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좌파 활동가들은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주장과 비판을 아끼지 말고 점거파업 같은 효과적인 투쟁 전술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결집해야 한다.

조명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암: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지금 리비아 혁명 세력의 중심지인 뱅가지에서 혁명가들이 서방의 개입에 반대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Pphoto

사이먼 아사프

리비아 혁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번 항쟁은 아랍 세계를 휩쓰는 반란의 물결을 심화시키고 급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은 서방 개입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월 17일 시작된 리비아 반란은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이 반란은 카다피 정권에 충성하는 중무장한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민중 운동의 힘으로 독재자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리비아에서는 군대와 기타 국가 기구들이 여전히 존속해 있고 몇 가지 양보를 제시하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힘은 단순히 잔혹한 탄압만이 아니라 카다피가 나눠 준 떡고물 — 석유 판매금에서 나온 — 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지지에서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카다피 정권은 부족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이용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가 그런 전통적 관계들을 약화시키자 정권은 일부 국민들이 정부 사업과 석유 사업에서 이득을 취하게 하면서 지지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짝퉁한 보수, 안정된 일자리,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았다. 이들은 주로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와 수도 트리폴리에서 살고 있다.

국가안보 기구에서 일한 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억압했다. 이처럼 카다피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번 혁명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앗아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현존 체제를 방어하려고 나섰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상대로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국적인 항쟁에 나섰다.

카다피는 저항세력을 가리켜 ‘성급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저항세력이 무작정 달려드는 폭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항세력은 카다피 정권을 몰아내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청년 저항세력들은 징집된 사병들을 설득해 반정부 진영으로 끌어들이었다. 또, 그들은 카다피의 무자비하고 잘 훈련된 군대와 전투를 벌였고, 온갖 어려움을극

복하고 중요한 승리들을 쟁취했다.

열혈 친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했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제 리비아 혁명은 서방 정부 개입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서방 정부들은 반란의 확산을 억제하려 한다. 그들은 리비아의 광대한 석유 자원을 서방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다면 리비아의 분단을 받아들일 생각이다.

카다피의 살인마들 아래 고통받는 도

서방의 개입은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친정부 세력을 무찌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시와 마을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것은 이들이 너무나 불리한 처지에서 친카다피 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마들

이런 끔찍한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외부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에 냉담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서방 정부의 개입은 엄청난 대가를 수반한다.

지금 논의 중인 비행금지구역은 엄청난 공군 화력을 동원해야 설정될 수 있다. 그것은 징집된 사병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이들을 친정부 입장으로 몰아갈 것이다.

또, 서방 열강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다피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미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는가.

서방의 개입은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친정부 세력을 무찌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동부의 혁명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카다피 정부는 서부 지역에 있는 몇몇 저항세력의 핵심 근거지들 — 고품 도시 미스라타, 석유 생산지 알자위야, 수도 트리폴리 등 — 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의 노동계급 거주지들은 이번 반란의 중심지였다.

서방 정부들은 리비아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저항세력이 갈수록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리비아 혁명의 발전이 더뎌지고, 저항세력이 리비아 서부에서 항쟁을 벌이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리비아의 분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력도 강해질 것이다.

서방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면서 이번 혁명의 발생지인 뱅가지의 혁명 지도부 내에서도 분열이 생겨났다.

이번 반란 과정에서 탄생한 혁명 지도부는 리비아 곳곳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전국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도부 중에는 과거 카다피 정권의 거물들이 포함돼 있다.

전국위원회는 이미 타협을 하고 있다. 전국위원회가 발표한 초기 선언문들을 보면, 카다피가 서명한 모든 국제 협정들을 준수하겠다고 적혀 있다.

만약 리비아 혁명이 서방 제국주의와 동맹한다면 리비아인들과 다른 아랍 세계 민중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서방 정부의 개입은 카다피가 제국주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혁명을 고립시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유엔은 전국위원회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카다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중재자’를 임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비아 혁명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취를 거뒀다.

용감한 비무장 청년들은 끈기있게 전투를 벌였고, 놀라운 힘을 보여 줬다.

서방 정부들은 이들의 투쟁을 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열강들이 아니라 리비아의 혁명가들이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지자 충격받았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평범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은 왕실의 부패와 정실주의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작성했고,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핵심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은 집권 왕가와 이른바 ‘왕자 1천 명’ 손에 집중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가졌지만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인은 빈곤하게 산다.

주민 다수가 시아파 무슬림인 동부 지역에서는 수감된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

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여성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부라부라 막대한 재정 지원, 지방 정부 선거 실시, 여성 투표권 보장(출마권은 배제)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반정부 행동들을 강력히 탄압하겠다고 위협한다.

정부에 항의하는 ‘분노의 날’ 시위를

호소했던 페이스북 관리자는 지난주 살해됐고,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도 체포됐다.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모든 공개 시위를 분쇄하려고 병사 1만 명을 배치했다.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